

NEWS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조선대 의대생 복학 마감 임박에도 '요지부동'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도, 전세사기피해자 설문조사 내달 8일까지... 피해 유형 등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피해자 및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2월 말 현재 97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85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이에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법률·금융·주거·행정 지원방안도입 검토, 국토교통부 및 전남도의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https://naver.me/xNL0mM1k)에서 진행된다. 피해 유형 및 피해 금액 등 기본 정보, 법률·금융·주거·행정 지원 등 선호하는 지원정책,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서비스 선호도 등을 포함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대구모 제적 사태 우려...28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전남대 제적통보서 준비·'뒤늦은 복학' 허용 검토

조선대학교 의대 휴학생들의 복학 신청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이 미복귀자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휴학생에 대한 복학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마감일 하루 전날까지 복학 절차를 마친 휴학생들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대 관계자는 "마감 시각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가 반전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 878명 중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에 재

학 중이다. 나머지 689명은 휴학 상태이며, 이중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으로 파악된다.

앞서 조선대는 미등록·미복학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한 바 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는 복학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 주 중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처분은 논의해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친 전남대는 미복귀 의대생에게 제적 통보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는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의 복학을 허용할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휴학원 반려 후 복학을 신청하지 않아 제적 처분을 받게 된 의대생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서 일각에서는 재입학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은 2024학년 학생들이다. 많은 대학이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학생을 재입학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고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지역의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들이 아닌 터라 재입학이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정확한 답을 하기엔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립순천대학교는 27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개소식을 갖고, 첨단소재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형 청년 인재 육성 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을 선포했다.

순천대 광양캠퍼스 개소...인재 양성 본격화

'첨단소재 특화 교육기지' 육성...지·산·학 협력 강화 내년까지 임시 캠퍼스 운영키로...2030년 완공 목표

국립순천대학교는 27일 광양만권 소재 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개소식을 갖고, 첨단소재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형 청년 인재 육성 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을 선포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병문 순천대 총장을 비롯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글로벌 순천대 과학기술자문단, 지역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캠퍼스는 지역 특화 산업인 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실과 실험장비실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로보틱스 시스템, 이차

전지 시스템 등 최신 장비가 마련됐다. 특히 각종 실험장비실은 최신의 첨단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해 기업 맞춤형 산학 연계 교육과정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특화 산업인 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감소 지역 기업 육성, 산학연계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남형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순천대는 3단계 캠퍼스 육성 로드맵에 따라 정주형 청년 인재 200명 양성, 지역 발전 선도 감소기업 100개사 육성, 평생 교육 수강생 500명 확보, 해외 유학생

100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첨단부품소재·글로벌에너지 관련 전공을 신설해 광양캠퍼스를 세계적인 '첨단소재 특화 교육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광양캠퍼스는 2026년까지는 지식산업센터 내 임시캠퍼스로 운영한다. 본캠퍼스는 광양시 중동 공유수면부지에 4400㎡ 규모의 '첨단소재연구센터'를 신축해 들어설 방침이다.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병문 순천대 총장은 "광양캠퍼스는 지역과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식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배우고 일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광주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양부남, 내달 1일 국회서 정책포럼 개최

광주 서구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을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서구을·서진)은 다음달 1일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국회 도서관에서 행정규, 권영진, 이상권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광주·인천·부산의 국가도시공원 본격 추진과 지정을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다.

서구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도시 광주' 브랜드 향상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국가자연공원, 국가도시공원 등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유일한 도시가 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은 300만㎡ 이상이지만, 중앙근린공원은 약 279만㎡로 지정요건이 미비하다. 하지만 최근 100만㎡ 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 될 것으로 예상,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주 중앙근린공원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양부남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며 "평민들의 중앙근린공원이 광주시의 대표성을 기질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이 반영된 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본부장에 강기정 시장...예찰 강화·진화가용자원 정비

광주시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으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관리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을 차장으로, 기후환경국장을 통제관으로, 녹지정책과장을 상황총괄담당관으로 구성했다.

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고광안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1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대응을 위해 소각행위 금지, 산불감시원 예찰활동 강화,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 진화 가용자원 파악·정비,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등 산불 초기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